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21일 (음력 11월 15일) 금요일

남해안 철도 목포~보성 구간 전철화 '파란불'

타당성 재조사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공사중단 無

내년 4월 전철화 실시 설계 이뤄지도록 기간 단축 요청 계획

남해안 철도 전남 목포~보성 구간의 전철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남해안 철도 목포 임성리~보성 보성읍간 연장 82.5㎞ 구간에 대한 전철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이 구간의 전철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선 철도 공사가 진행중인 이 구간에 대한 전철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B/C 등 경제성을 보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전철화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만을 따지게 돼 전철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당당 재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정도 공사가 멈춰야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게 되면 공사 중단 없이 결과도 빠르면 3개월내에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기재부의 결정은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구간의 전철화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착공돼 2020완공 목표인 이 구간은 올 연말까지 공정률 53%가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1조3795억원이다.

전철화가 최종 결정되면 1506억원이 추가로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1조5301원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내년 4월 전차선 및 송변전 등 전철화 실시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후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사립유치원 비판하는 시민단체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의전화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이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교육청 감사 거부를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생애 첫 연금지원' 통과… 전남도의회 '뻘쭘'

경기 15만명 vs 전남 4500명…고작 2억 '싹뚝'

내년 복지부협의, 전남도 제1차 추경 반영 주목

전남도의회에서 좌초된 김영록 전남지사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 사업이 내년에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가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 제도'가 전남도의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막판 회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비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이 사업은 만 18살이 되는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인 9만원을 경기도가 대신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만 18세, 15만여명으로 1년 예산 규모가 147억원이나 된다.

뒤늦게 경기도의회 소식이 알려지자, 같은 취지의 제도이면서 규모가 훨씬 적은 2억여원을 삭감한 전남도의회는 '뻘쭘'하게 됐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경기도와 달리, 전남도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19년 만 18세 되는 전남지역 청년 2만1000명 가운데 약 20%인 4500명이 해당된다. 예산도 도비 2억250만원, 시군비 2억250만원 등 총 4억500만원이다.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다르고 인구감소·절벽 문제도 경기와 너무 다른 상황에서 전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단발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2억여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과 경기도는 상황이 너무 다른데도 경기도의회가 147억원의 예산을 고심끝에 통과시켰다"면서 "인구문제 해소의 일환인 이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전남도의회가 되레 예산을 삭감한 것은 너무 경솔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에 적극 나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노후보장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국민연금의 성격상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최남규 기자

성탄절 휴무로 다음 호 27일자 발행합니다

Photo 漫評

또 단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놓고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재차 가로막힐 경우, 다시 단식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돼야 하고, 최소한 의원정수 증가가 보장돼야 단식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단식을 중단한 게 잘한 건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보면)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는 사실상 합의가 된 것이고 표현만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손학규

나경원

손학규